



# 보도자료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김 태 호

www.taehois.com

E-mail. taehois@na.g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 208호 Tel. 02)784-0530 Fax. 02)788-3208

2011. 9. 29(木)

##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①]

###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효성 극대화방안 마련해야

- 정부, 대규모 시설 확충에만 집중.. 주민과의 소통이 최우선 -

#### 1 현황 및 문제점

① 원전 이외의 대안은 없는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피해를 목도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날마다 치솟는 기름값도 그 한 원인임

-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11년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 '10년보다 1,950억원(24.1%) 늘어난 1조 35억원 규모. 그러나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09년 현재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5.2%)에도 훨씬 못 미치는, 걸음마 수준임

※ <참고사항. 부안 등용마을의 경우 제도변경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기 증설 중단> 국내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의 원조라 불리는 전북 부안군 등용마을. 2003년 핵폐기물처리장 반대운동을 벌였던 이곳은 "전기 안 쓰고 살 수 있느냐"는 비판논리에 맞서 친환경적 삶을 지향. 30가구 50여명이 사는 이 마을에는 2005년 주민 출자로 설립한 부안시민발전소가 있음. 41kW의 용량을 갖춘 태양광 발전으로 마을 소요 전력 60%를 충당, 남는 전력은 한전에 kW당 532~716원에 판매함. 지난해 판매액은 3,000여만원. 수익은 출자자들에게 돌아갔음. 그러나 부안시민발전소가 그간 해마다 확충해오던 태양광 발전기기의 증설은 지난해부터 중단. 내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신 '의무할당제'가 도입되기 때문임.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조해주는 제도. 반면 발전량의 일정 규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무할당제는, 그 대상을 대규모 발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소규모 태양광·풍력발전소는 새로 짓기가 어려워진 셈임

-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부의 정책은 역행하고 있는 셈임. 제도는 대기업에 유리하게 바뀌었고, 주민과의 소통 없이 시설 확충에만 집중되고 있는 실정임
- 대표적 예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그린홈 100만호' 사업. 태양광 주택 수는 2004년 310가구에서 2009년 1만4,895가구로 늘어났지만 호당 보급량은 2.49kW에서 0.91kW로 줄어들었음. 발전량 자체도 미미한 수준. 미국 비영리재단 '퓨 자선기금'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용량은 국가 전체의 0.3%(399GW 중 1.2GW)에 불과
- ☞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sup>1)</sup>정책은 주민참여형, 지역분산형으로부터 시작,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② '2.5%냐, 0.7%냐.', 두 숫자는 모두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생산량이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전자는 2009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집계한 것이고, 후자는 같은 해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에 준한 결과임

- 두 숫자가 큰 차를 보이는 것은 국제기구와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분류법이 다르기 때문임.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와 신에너지(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를 포함. 반면 IEA의 재생가능에너지에는 산업폐기물과 재생 불가능한 도시폐기물, 연료전지 등이 포함 안 됨. 이는 유럽과 미국도 마찬가지임
- 특히 변수는 폐기물. 폐기물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75%(2009년 기준)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에너지원. 그러나 국제사회는 대개 재생 가능한 도시폐기물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국제기구와 국내 통계는 큰 차가 나고 있는 것임
- ※ 정부도 이런 혼란을 알고, 2009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신재생에너지 분류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 그 결과 2010년 에경원에서는 ▲현행에서 재생불가 폐기물과 연료전지 등 일부 에너지를 빼는 안 ▲신에너지를 제외하는 안 ▲재생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신에너지 청정에너지로 나누는 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 정부는 "3안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지만 내년은 돼야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됨

1) 화석에너지 고갈과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존 화석연료나 햇빛, 물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얻게 됨. 한국은 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와 신에너지(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11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고 있음

- 에너지 절약을 수반하지 않은 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999년 11만8,902MWh(시간당 사용한 전력량, 1MW는 1,000kW)에서 2009년 461만 7,886MWh로 10년 새 40배 가량 증가. 하지만 총 발전량도 두 배 가까이 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0.05%에서 1.07%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침
- ↳ 전력소비를 조장하는 왜곡된 전력요금체계 개편과 빌딩 및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펼쳤다면 전력소비량이 과연 이렇게 늘어 났을까임. 에너지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수요관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

**③ 정책의 혼선으로 삐걱거리는 신재생에너지는 투자 규모에서도 초기단계**

- 미국 비영리재단인 '퓨 자선기금'에 따르면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성적은 G20 국가 가운데 17위(2010년 기준)에 머물렀음. 2009년 투자한 3억 5,600만 달러는 20개국 총 투자액의 0.17%에 불과. 원자력과의 예산 차이도 큰 액수임
  - 최근 5년간 예산을 분석한 결과, 핵발전 연구개발 및 홍보비용은 1조4,330억원인데 비해 신재생에너지는 8,777억원이었음

**④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하향식 체계로는 에너지자립마을이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 정부의 에너지자립마을 역할모델인 독일 운데 마을의 경우 사업 추진에만 무려 7년이 걸렸음. 주민들이 참여를 결정하고 운영방법을 논의하는데 걸린 시간이 대부분. 그런 후에 바이오매스 시설이 들어섰음. 정부가 사업설명회 한번으로 동의서에 도장을 찍게 하고 부지를 선정하는 우리와는 출발부터가 다름

**⑤ 기술이 첨단을 달린다지만 여전히 전등 하나 켜지 못하는 집들이 있음**

-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국의 425가구(2010년 8월 기준)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음. 한전은 도서 10가구, 벽지 3가구 이상이 돼야 전기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강원 산간지역과 충남, 전남 등지의 섬에 전기 미공급 가구가 특히 몰려있음
-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빈곤 가정의 에너지 소외 문제. 난방비도 제대로 대기 힘든 저소득층에게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현재 정부지원을 50% 받는 태양광발전기의 경우 부담해야 하는 돈은 700만~1,000만원(용량 3kW 기준).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높은 설비단가만 해결할 수 있다면 신재생에너지를 저소득층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님

☞ 지금처럼 값비싼 설비를 외국에서 들여오는 대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개발한 기기를 적절한 가격에 보급한다면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평등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임